

- INAUGURAL SEMINAR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국가 대전환의 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혁신

일시 | DATE

2026. 9. 15. (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VENUE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공동주최 | Co-host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 강승주 의원실

프로그램

15:20-15:30	입장 및 착석
15:30-15:35	개회 및 국민의례
15:35-15:55	개회사 박문찬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소장 축사 및 내빈소개
15:55-16:0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6:00-16:30	[기조강연]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이 만드는 국가 대전환 김경수 現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 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6:35-17:10	[주제발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전략 김경희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부소장
17:10-17:35	[종합토론] 좌장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론 김종한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강승주 (부산시의원) 백충기 (BNK경영연구원 부울경경제연구팀장)
17:35-17:55	질의응답
17:55-18:00	폐회

축 사

부산광역시장
전 재 수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소 창립을 위해 애써주신 박문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강승주 부산광역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짚어주실 김경수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님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해 주실 김경희 부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에서는 수도권도 과밀의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지역은 청년과 산업 기반이 빠져나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중앙의 자원을 지역에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가진 강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특화산업을 키우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며 투자와 금융, 연구개발과 대학, 인재 양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머물러야 지역의 미래도 이어집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산항과 해운항만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해양수도권과 북극항로 경제권을 만들어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세우겠습니다. 부산의 성장이 남부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부산의 과제가 대한민국의 과제가 되고 부산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가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그 정책을 산업과 투자, 좋은 일자리로 이어주는 실천적인 지식 플랫폼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논의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창립과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강 무 길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뜻깊은 출범과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문찬 소장님과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강승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께도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과 생산가능인구가 빠져나가고 기업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2025년 지방소멸위험지수 0.45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 해양·금융·관광 등 다양한 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도시입니다.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에도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지역이 지닌 강점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결국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앵커기업을 육성해 기업과 자본이 들어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갖춰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산업과 기업,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역할에 기대가 큼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부산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를 잇는 실질적인 정책 허브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소의 출범과 창립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신 승 근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신승근입니다.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출발을 위해 애써주신 박문찬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창립기념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산업구조의 전환 등 여러 변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스스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연구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와 가능성이 다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열리는 창립기념 세미나 역시 그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그 논의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지방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고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와도 서로의 연구와 경험을 나누며 지방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첫걸음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BNK금융그룹
회장 빈 대 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확충되길 늘 바랐던 BN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구소 출범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국가대전환의 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전환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이 스스로 기업, 자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지역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場)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이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의 해안이 공유되어 다양한 대응 과제와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BNK금융그룹은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뜻깊은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고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소장 박 문 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소장 박문찬입니다.

오늘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구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시의회 및 각 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산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우 바쁘신 와중에 기조 강연을 해 주시는 김경수 대통령 정부특별 보좌관님과 토론을 위해 준비해 주신 강승수 시의원님 및 토론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연구소를 출범시키는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뛰어야 하며,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방은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 수도권과 지역간 경제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기타 도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 인적자원,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간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자체 역량과 지역경제, 그리고 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정책 제안은 물론이고,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 지역과 대학, 지역과 기업을 연결하는 실천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정책,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구”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산업과 경제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유한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자체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생의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산업, 교육, 주거, 문화가 하나로 맞물리는 종합적 관점에서 지방소멸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그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도 결국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세미나가 연구소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넘어, 지방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가 지역의 희망을 연구하고,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지역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15일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소장 박문찬

|기조강연|

**‘3대 메가프로젝트
- 5극3특’이 만드는 국가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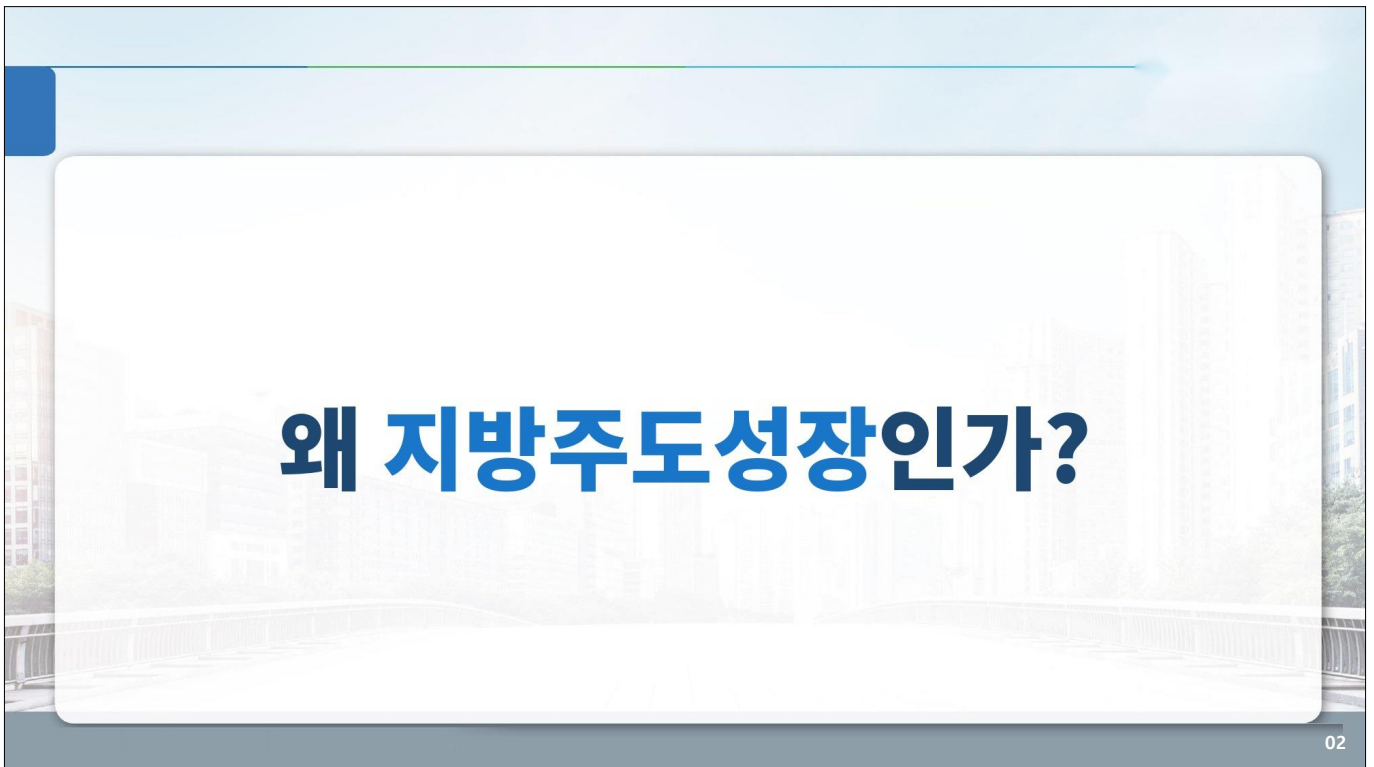
김경수 | 現.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창립 세미나 · 부산 · 2026. 9. 15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으로 만드는 국가대전환

국가균형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 2026년 추진현황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전 경상남도지사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 '8년'



참여정부 (2003~2008)

-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신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등)
- 국가균형발전법 제정(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약 5.5조 원)
- 4대 초광역 경제권 구상 발표(2006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이명박 정부 (2008~2013)

- 5+2 광역경제권 정책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3대추진전략(신도산업 육성·인력양성·인프라 확충)
- 국가균형발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약 9조 원)

박근혜 정부 (2013~2017)

- 지역행복생활권 중심 프로젝트 추진
- 63개 지역생활권 구성
-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지원

문재인 정부 (2017~2022)

- 지역주도 성장(혁신도시시즌2,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균형뉴딜)
- 초광역협력강화(무율권,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메가시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생활SOC 확충
-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약 1조 원)

03

노무현대통령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발표 (2007.2.)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 공공주도,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1단계)에 이어, 지방에 기업·사람 유인 및 민간투자 획기적 강화 추진



※ 노무현 사료관(2007)

지역·국가경쟁력 극대화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발표

2006

4대 초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2007

5+2 초광역경제권

* (초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권, 동남권
+ (지역경제권) 강원권, 제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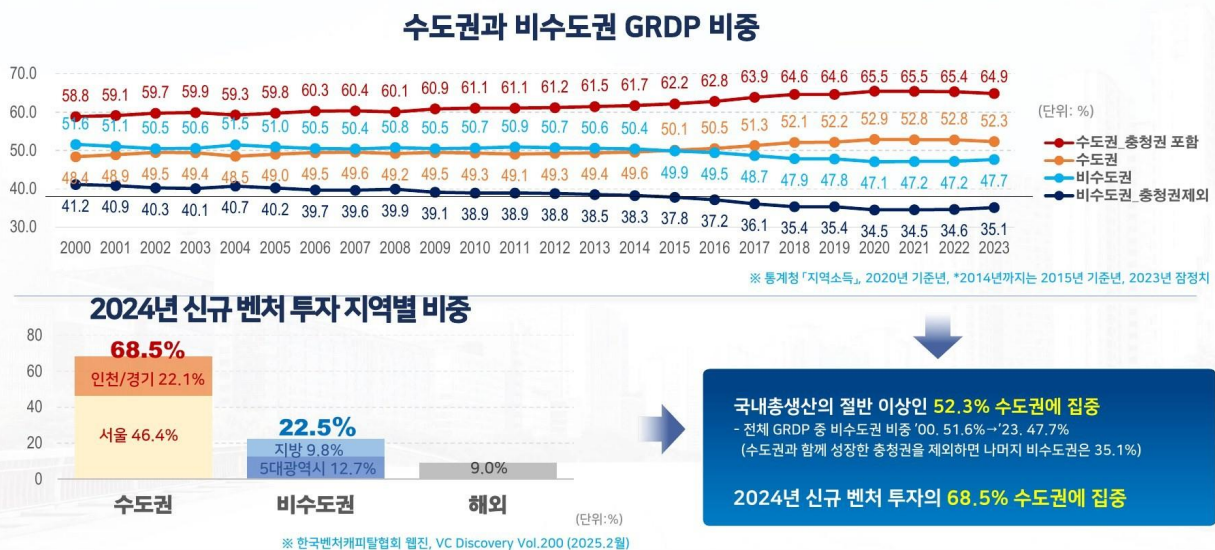
04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05

자본·경제 수도권 집중, 경제적 기회의 양극화



06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향한 악순환 고리



07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의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권역별 초광역 협력 전략 추진

부산·울산·경남

- 김경수 도지사, 부울경 메가시티 제안 ('20.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별지방자치제도 도입 ('20.12)
-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행정안전부 승인 ('22.4)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무산 선언 ('22.10)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출범 ('23.3)

대전·세종 충북·충남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 ('20.11)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23.1)
- 충청광역연합 규약 개정안,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24.5)

대구·경북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발표 ('20.5,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합의 ('24.5)
- TK 행정통합 합의문 발표 ('24.10, 대구·경북·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 안동, 행정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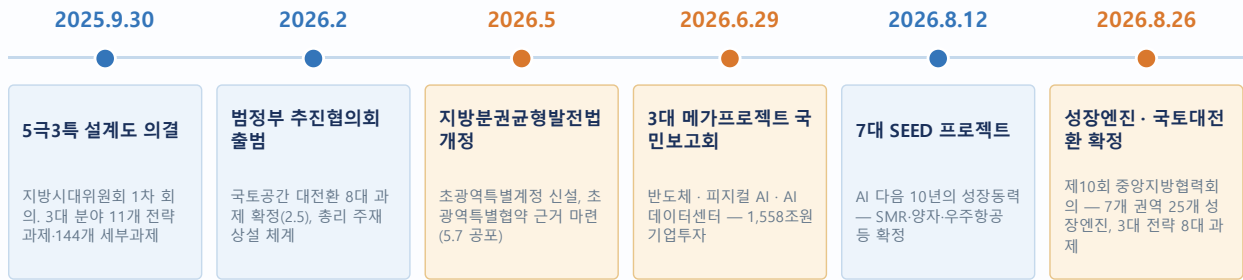
광주·전남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20.11)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초광역협력사업 합의('21.12)
-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24.7)

09

그 후 1년 : '설계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2026. 9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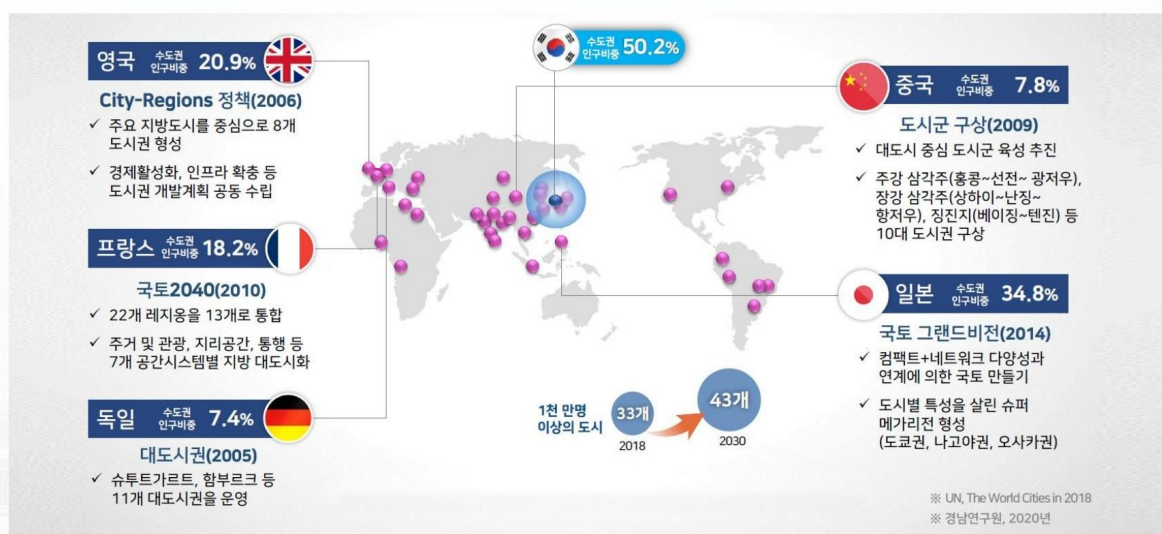
1년 전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림이 법·예산·기업투자를 갖춘 '확정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원본 슬라이드의 (예시) 표기 내용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주황색 배지가 붙은 업데이트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2025.9.30),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2026.2~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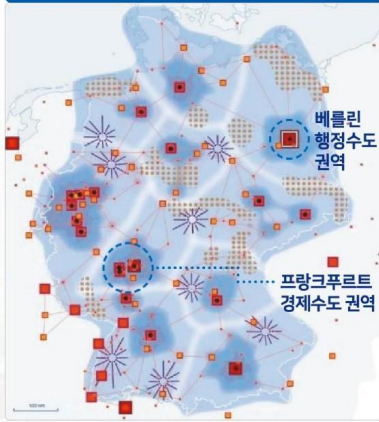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선 주요 국가의 초광역 발전 전략



11

독일, 메가시티를 통한 대도시권 구축

독일 대도시권, 모자이크형 → 네트워크형 전환
(라인-루르,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 운영)



※ 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도시권



슈투트가르트 대도시권역 교통 네트워크 S-Bahn 열차 노선도



지역연합법에 근거한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재정수입

구분	계	수수료	보조금		분담금			기타		
					일반재원	대중교통	폐기물처리	지역화 재원	신용차입 재원	
금액 (백만유로)	442.4	140.8	54.8	87.1	23.4	61.0	2.1	159.7	94.2	65.5
비중(%)	100.00	31.83	12.38	19.69	5.29	13.92	0.48	36.1	21.29	14.81
지역연합법 근거	-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3항	제22조 제4항	-	-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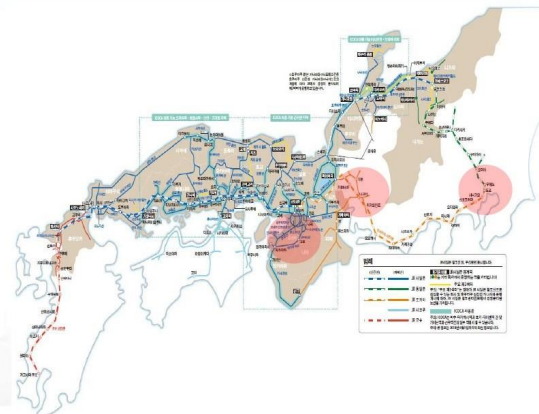
일본, 3대 도시권의 1일 생활권 압축

도쿄권-나고야권-오사카권 초광역거대도시권역 형성
광역교통망 기반 도시권 간 연계성 극대화



※ 대신증권(2024), 인구감소사회의 도시전략

오사카권 주요 철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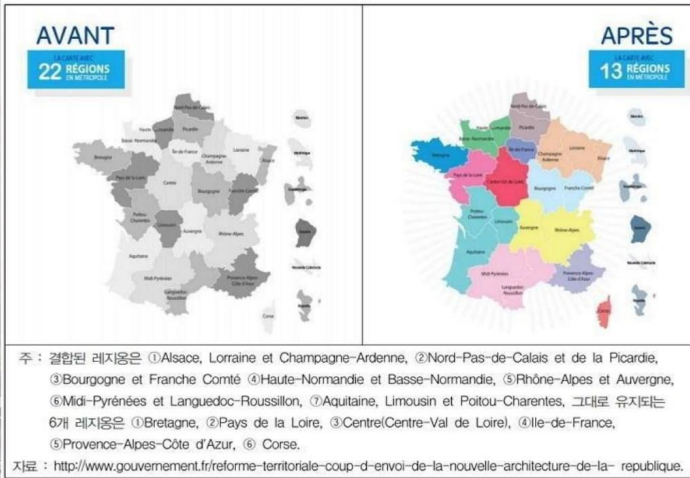


※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13

프랑스 2016년 레지옹 통합, 22개 → 13개 축소

< 2015년까지의 22개 레지옹(avant)과 2016년부터의 13개 레지옹(après) 비교 >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레지옹)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 재정투자 등 협력계약 체결 (7년 단위)
- ✓ 레지옹 평균 인구 300만명 → 500만명으로 증가
- ✓ 초광역 정부의 전략적 역할 및 권한 강화
- ✓ 지역간 인구와 경제력 격차 완화
- ✓ 1극 체제의 다극체제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이 만드는 국가대전환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수도권 집중의 역사에서 AI 시대로

2026. 9 업데이트

1세대 · 산업화 시대

수도권 · 동남권 양대 축 집중성장

-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토 성장축
-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 · 발전

2세대 · 정보화 시대

민간은 수도권 집중, 정부는 분산 정책

- IT 기업 등 민간 투자의 수도권 집중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일부 인구 분산·경제 효과에도 정책 변경 등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

3세대 · AI 시대

지방의 전략적 가치 상승

- 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부지 확보는 지방의 강점
-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프라는 지방에 확충 가능
- 지방 산업의 AI 대전환(AI)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 확보

이재명 정부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전환 드라이브

지역은 시혜·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전략 자산' | 지역 균형성장은 지방소멸 대응이 아니라 '국가성장전략'의 관점 전환

⇒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역사적 전환기

16

5국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 추진 목표 :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 만들기

- ▶ 경제권 - 전략산업 + 인재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 ▶ 생활권 -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

• 추진 전략

- ▶ 전략산업 특화(기업투자유치) + 인재양성 + 창업생태계 + 메가규제특구 + 파격적 지원 5종 패키지
- ▶ 광역대중교통망 + 주거 + 의료 + 교육 + 문화 + 관광
- ▶ 대도시권 - 거점도시권 - 중소도시/농산어촌 연계

- 비전 - 자치분권 기반 5국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 목표 -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17

국가균형성장 전략

· 수도권 집중 + 지역산업 위기 + 인구구조 급변 심증고 ·

10개 부처, 42개 국정과제 시너지 바탕으로 **"4대 실행전략 + 기반전략"** 마련

비전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목표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4대 실행전략

1 진짜 성장엔진, 지역

- 5극3특별 성장엔진 선정
*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성장 5중세트 지원

2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

- 교통·인재 등 집중투자
- 행정수도 완성 (세종 집무실·인사 등)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소도시 육성

3 에너지 전환과 성장, K-농산어촌

- 농림어업 전략산업화
- 재생에너지 프론티어
- K-푸드 세계진출
- 체육·치유·관광 벨트

4 균등하고 고른 삶

- 공공의료 강화
- 지역중심 돌봄체계
- 문화 취약지역 지원
- 지역교육 혁신

기반 전략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참여 실질화

자주재정권 강화를 통한 지역주도 성장기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및 공공서비스 광역화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18

국가균형성장 전략 거버넌스·재정·제도의 구조적 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년 14.7조원 규모

재정분권 확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 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 '25년 3.8조원 → '26년 0.0조원 이상
- 초광역권이 계획·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신설
* '26년 시범사업 실시
- 지자체가 계획, 국가가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활성화

제도 혁신

- 지역 SOC와 R&D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개편
* ① 예비타당성 상향(500→1,000억), ② R&D사업 예비타당성, ③ 균형성장 평가항목 신설
- 5극3특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난립한 특구·정비
* 87중, 2,437개
-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19

확정 ① 재정과 제도 : '돈의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2026. 9 업데이트

3.8조 → 10.6조

포괄보조금 확대 (2025 → 2026)

지자체가 용도를 정하는 예산 약 2.8배

초광역특별계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2026.5.7)

시·도별 계정을 넘는 초광역 단위 계정 신설

초광역특별협약

중앙-지방 5년 단위 협약

발전전략·사업지원·규제특례 포함, 지방 시대위 심의

지방우대지수

예산편성 과정에 적용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예타·민간투자 제도 개편

초광역 계획 - 협약 - 예산의 연결 구조 (2027년까지)

① 지침

초광역 단위 계획수립 지침 마련 (국토부·국토연구원, ~2026.12)

② 계획

시·도가 초광역권계획(20년)·초광역권발전계획(5년) 수립

③ 협약

지방시대위 심의 후 중앙-지방 5년 단위 협약 체결 (2027)

④ 예산

협약 체결 사업에 초광역특별계정 우선 지원

계획을 세운 권역이 돈을 가져갑니다 — 2026년 하반기 육성계획, 2027년 협약이 승부처입니다.

출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2026.5.7), 국토교통부 「초광역단위 국토계획」, 지방시대위원회

20

확정 ②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 3대 전략 · 8대 과제

2026. 9 업데이트

비전 :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 5국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 국토대전환

전략 1

국토공간 재설계

- 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대통령 집무실 2029.8 / 국회의사당 2033)
- ②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기업형첨단도시·RE100 산단)
- ③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전략 2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 ① 5국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 3대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 ② 메가특구 도입 (규제완화+패키지)
- ③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전략 3

지방 활력 기반 조성

- ①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투자 촉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주여건)
- ② 지방우대지수·균형성장영향평가
- ③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정책금융 지방우대 개편

추진체계 : 지방주도 - 중앙지원

(최상위) 대통령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회의 / (중앙)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 + 각 부처 / (지방) 지방시대위원회 + 5국3특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

목표 : 거점 중심 규모의 경제 + 성장엔진·메가특구·지역인재 연계 + 기업·인재의 지역 유입

출처 :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6.8.26)

21

확정 ③ 3대 메가프로젝트 : 1,558조원의 공간 재배치

2026. 9 업데이트

승부처 ①

더 성장 가능한 공간 : 지역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생산과 혁신의 거점으로

승부처 ②

한국형 AI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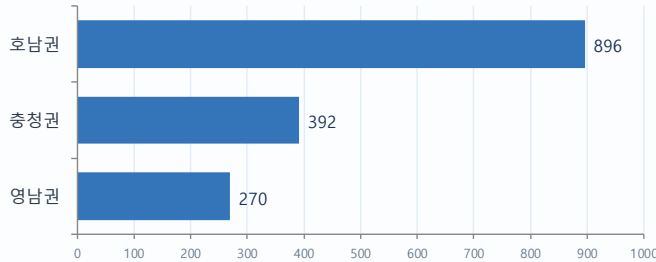
핵심요소 반도체 · 확산 퍼지컬 AI · 기반 AI 데이터 센터

승부처 ③

모두의 혁신 : 산업 생태계

인력 · 소재부품장비 · 전력 등 생태계 경쟁력 확보

3대 메가프로젝트 권역별 기업 투자계획 (조원, 잠정)



총 1,558조원 (잠정)

호남권 896조 — 반도체 팹 4기 800조 + AIDC 87조 등
충청권 392조 — 반도체 156조 + AIDC 150조 등
영남권 270조 — AIDC 146조 + 퍼지컬AI 13조
+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111조

반도체 팹은 서남권, HBM 패키징은 충청권.
영남권 몫은 17.3% — 이 숫자의 의미는
동남권 파트에서 정면으로 다룹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 당 특위 회의자료(2026.7.10) / 별도 집계 강원권 AIDC 190조원 추산

22

메가프로젝트 ① 반도체 : 3S + 1F

2026. 9 업데이트

SPEED · 속도전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

5년 내 메모리(D램) 생산능력 2배, 용인 국가산단 7년(삼성), 일반산단 12년(SKH) 단축, 평택 5·6호기 동시 건설

STRONGHOLD · 거점전

성장거점의 전국화

서남권 = 제2 생산거점(800조원, 메모리 팹 4기)
충청권 = HBM 패키징 거점(81조원)
동남·대경권 = 소부장 혁신거점

SPEARHEAD · 선도전

차세대 시장 선점

차세대 메모리(PIM·뉴로모픽), 온디바이스·온센서 AI 반도체, AI 서버용 반도체, 국방반도체(법 2026.12 시행)

FULL SUPPORT — 대통령 주재 특위 · 반도체 파르 · 특별회계 2조원(2027) · 인력 10만 명 양성

부산

전력반도체 — 제2공공팹(8인치 SiC) 구축, 전력반도체지원단 발족

동남권 소부장 혁신거점의 실질적 축, 조선·자동차·원전의 전력변환 수요와 직결

구미

핵심 소부장 — 방산 특화 시스템반도체 시험·평가, 소재·부품 실증 인프라

대경권 연계, 국방반도체법 시행(2026.12)과 맞물리는 지점

출처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

23

메가프로젝트 ② 피지컬 AI : 3M 압축성장

2026. 9 업데이트

1,220대

로봇 밀도 세계 1위 (1만 명당)

2위 싱가포르 770 · 3위 중국 470 (IFR)

1%

그러나 글로벌 로봇 생산 비중

휴머노이드 생산 : 中 86% · 美 4% · 韓 1% (OMNIA)

3억 대

2040년 휴머노이드 누적 생산 전망

2025년 2만 대 → 2040년 3억 대 (BoA)

로봇을 '잘 쓰는 나라'에서 '잘 만드는 나라'로 — 3M 전략

M.AX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업종별 스페셜리스트 AI로봇 육성, 10대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2028년 상용화, 연 1천 개 현장 보급

MASTER

핵심 요소 경쟁력

10대 업종 데이터팩토리,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R&D, 인력 1만 명

MASS PRODUCTION

지역 중심 양산 기반

새만금 = 로봇 파운드리·부품클러스터 / 대경권 = 로봇 테스트필드·자동차 부품업체 업종전환 지원

출처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 IFR, OMNIA, BoA

24

메가프로젝트 ③ AI 데이터센터 : 총 18.4GW

2026. 9 업데이트

1단계 (~2029)

8.4GW · 550조원

SK 울산 1GW · GS 동해 2.4GW · 네이버 세종 1GW+α — 2028 착공, 2029 운영

2단계 (~2035)

10GW 추가

SK 1단계 5GW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

결과

아·태 최대 AI 인프라 허브

2030년 아·태 AIDC 58GW 전망 → 국내 14.37GW = 약 25%

울산 1GW — 동남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

업계 추산 1GW 효과 : 투자 60~70조원, 건설 일평균 5천 명·운영 일평균 1천 명, 서버·전력·냉각 등 전후방 생태계와 국산장비 실증(테스트랩 5MW+상용 5MW)이 따라붙습니다.

① AIDC 특별법 2027.3 시행 → 'AIDC 특화 클러스터' 지정

지정을 받아야 산업 육성 거점이 됩니다. 울산·부산·경남 공동 준비가 필요한 과제

②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2026년 하반기)

발전소 인근 지역이 싸게 쓰는 구조 — 원전·재생에너지 입지의 동남권이 직접 수혜

출처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 당 특위 자료(2026.7.10)

25

확정 ④ 7대 SEED : AI 다음 10년의 씨앗 (8.12)

2026. 9 업데이트

3대 분야 · 7대 프로젝트 | 2026.8.12 대통령 주재 발표 | 역량강화 필수품목 R&D 5년간 10조원

미래 청정에너지

SMR

경수형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 2030년대 착수

미래 청정에너지

핵융합

2035년까지 혁신 핵융합로 건설, 2030년대 말 전력생산

미래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초대형 풍력 터빈, 수전해

차세대 프린티어

양자

2029년 오류정정 100큐비트급 국산 QPU 확보

차세대 프린티어

우주 · 항공

2029~32 달궤도위성·달착륙선, 2035 저궤도 위성통신망

차세대 프린티어

첨단 바이오

2030 AI바이오 인프라, 2035 BCI 상용화

기반

첨단 공급망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2030년 20%, 2028 새만금 비축기지

동남권과의 접점

일곱 중 셋이 우리 산업

SMR = 창원 원전 기자재 / 재생e = 조선 기자재 해상풍력 / 우주항공 = 사천·진주

요구할 것 : 7대 SEED의 실증·양산 거점을 동남권 성장엔진·메가특구와 '한 묶음'으로 지정하는 것

R&D가 어디서 이뤄지느냐가 10년 뒤 산업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금이 개입할 시점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 :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2026.8.12)

26

'예시'에서 '확정'으로 : 7개 권역 25개 성장엔진

2026. 9 업데이트

권역	지향	성장엔진 (권역별 3~4개)
충북권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 첨단 배터리 / 미래 방산·수송
서남권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	미래 전력시스템 /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 AI 자율주행 /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대경권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 첨단 모빌리티 부품 / 첨단 AI 로봇
동남권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	첨단 조선·해운 / 우주항공·방산 /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 차세대 원전·에너지
전북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 플랫폼	그린수소 플랫폼 / 첨단로봇 파운드리 / 농·생명 바이오
강원	AI·청정산업 혁신거점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 특수 반도체·세라믹 / 청정 자원·관광
제주	미래산업 프린티어 실증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 소형위성시스템 / 청정바이오 웰니스

선정 기준 : 3대 메가프로젝트(기업 투자) + 지역 강점 + 성장 잠재력 + 국가 전략 정합성 | AI는 전 권역 공통

중앙·지방 협의 100여 회 · 기업 600여 개 개별 면담 · 전략포럼 7회를 거쳐 확정 / 성장엔진 발표에서는 충청권을 '충북권', 호남권을 '서남권'으로 표기

출처 : 관계부처 합동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2026.8.26)

27

동남권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 : 4대 엔진과 역할 분담

2026. 9 업데이트

성장엔진 ①

첨단 조선 · 해운

전기·수소·암모니아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선상탄소포집, 스마트조선소(AI 용접·도장), 해운·물류·항만 플랫폼

성장엔진 ②

우주항공 · 방산

항공기 터보팬엔진, UAM 핵심부품, 저궤도 위성 발사체·분체·탑재체, 무인 잠수정·무인수상정, AI 무인전투차량

성장엔진 ③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전기·수소·자율주행차, 자이언트캐스팅, AI·로봇 자동화설비, 전동화 모듈, 차량용 전력반도체·MLCC

성장엔진 ④

차세대 원전 · 에너지

초소형원전(MMR)·SMR·4세대 원자로·원전 기자재, 원전해체 엔지니어링, ESS, 산업용 수소·수소터빈

부산 · 울산 · 경남의 역할 분담



AI 전환의 사령탑

ICT·디지털 R&D로 중소·중견 제조 공급망의 AI 전환 주도, 전력반도체 제2공공팩, 항만·물류 플랫폼



제조혁신의 핵심 거점

조선·자동차 대규모 생산 기반, SK 1GW AIDC, 수소·에너지 인프라 — 동남권 M.AX의 실증 무대



전략 제조 기지

우주항공·방산(사천·진주), 창원 원전·SMR 기자재, 뿌리 제조산업 — 미래 신산업의 소재·부품

동남권 : 인구 754만 · GRDP 366조원(14.3%) · 제조업 생산 약 20% · 조선 79.9% · 방산 57.5%

출처 : 국가데이터처(2024),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2026.8), 지방정부 발표(2026.8)

28

성장엔진을 움직이는 돈과 제도 : 7대 패키지 · 메가특구

2026. 9 업데이트

① 재정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대기업 3천억 ↑·중견 1천억 ↑ 투자에 국내 최고수준 협상 지원

② 금융

지방에 유동성 공급

국민성장펀드 40%(80조+α) 지방, 지역펀드 10조, 정책금융 130→164조원 +α

③ 세제

최대 50% 추가공제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 적용

④ 제도

메가특구 지정

인허가 일괄처리·자연 시 60일 내 처리, 추진단 1:1 원스톱

⑤ 기술

성장엔진 대형 R&D

엔카·협력사·산학연 1,000억원 내외, TIPS 50% 지방 할당

⑥ 인재

거점국립대 패키지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AI거점+공유대학, 특성화대학원 6개

⑦ 인프라

입지와 정주여건

기업형첨단도시, 국가산단 14곳, M.AX 클러스터 7개, 지역별 전기요금

공간적 구현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300여 개 규제특례 메뉴판 + 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파르’) 대통령 임명

원칙 :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특례를 설계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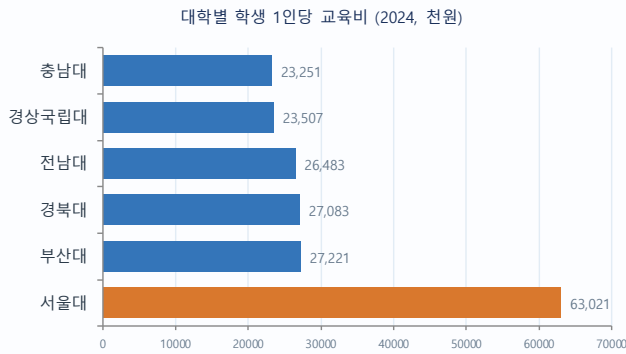
지정 절차 : 기업·지자체 계획 수립 → 산업부 신청 → 지방시대위(규제합리화위) 심의·의결 → 총리 승인 →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고시

출처 : 관계부처 합동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2026.8.26)

29

확정 ⑤ 인재 :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수단

2026. 9 업데이트



- ①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거점국립대에 권역 성장엔진 직결 단과대 선정·지원 + 융합연구원·AI거점·공유대학 패키지
- ②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2026년 선정계획 발표(6.17) — 권역별 연구·교육 거점 집중 투자
- ③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대학)**
교육부 발표(4.24) — 고교·대학·대학원·직업훈련 전주기 연계
- ④ **기업 수요 직결 트랙**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지방대 6개),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 확대

일자리가 있어도 사람을 못 키우면 기업은 오지 않습니다 — 인재가 성장엔진의 진짜 병목입니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2025),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대학)」(2026.4.24) ·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선정계획」(2026.6.17)

30

이제부터의 시간표 : 계획을 세운 권역이 가져갑니다

2026. 9 업데이트

- ① **2026년 3~4분기 :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지방정부 주도)**
기업투자 이행계획 + 정부 지원방안 반영 → 4분기 확정 및 기업 투자협약 체결
- ② **2026년 연내 : 메가특구법 제정 → 첫 지정**
법 제정 직후 핵심 투자 프로젝트 중심 신속 지정 — 첫 지정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
- ③ **2026년 12월 : 시행령 개정·초광역 계획지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 초광역 단위 계획수립 지침 마련
- ④ **2027년 : 초광역권계획 수립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협약 체결 사업에 초광역특별계정 우선 지원 — 협약이 곧 예산
- ⑤ **2027년 3월 : AIDC 특별법 시행 → 특화 클러스터 지정**
울산 1GW를 권역 산업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관문

매 반기 산업부-지방정부 '지방주도성장 협의체'가 권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 준비된 권역만 속도를 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주요 추진일정(2026.8), 국무조정실

31

동남권이 요구해야 할 다섯 가지, 그리고 부울경의 숙제

2026. 9 업데이트

- 1 동남권 메가특구를 가장 먼저, 가장 넓게**
조선·원전·항공은 규제가 가장 촘촘한 산업 — 300여 개 특례 메뉴에서 쓸 것을 지금 골라 설계
- 2 7대 SEED 실증·양산 거점을 동남권으로**
SMR·재생에너지·우주항공 — R&D 단계인 지금 개입해야 10년 뒤 양산이 여기서 이뤄집니다
- 3 AIDC 특화 클러스터 + 지역별 전기요금**
특별법 시행(2027.3) 전 3개 시·도 공동 준비
- 4 제조 AI(M.AX) 전환의 국가 시범권역**
M.AX 클러스터 7개 중 동남권 몫 확보, 중소 협력사 업종전환 비용의 국가 분담
- 5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의 초광역 공유**
부산대·경상국립대·울산대 각자 신청은 나눠먹기 — 조선·원전·항공 축 공유대학 모델로

숙제 : 연내 '동남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공동 수립 — 형식(특별연합 vs 행정통합) 논쟁은 그 다음입니다.

2022년에는 그릇을 먼저 만들려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면 그릇은 따라옵니다.

주 : 메가특구는 지자체가 기업과 특례를 설계해 신청 → 지방시대위 심의 → 총리 승인 →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32

청년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만들기!

대한민국 미래 희망 만들기!



33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
이재명정부가 만들겠습니다.

34

|주제발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전략

김경희 |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부소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전략

1. 서론

앞서 제시된 기조 강연을 통해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분과 거시적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당위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각 지역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당위성의 담론을 넘어,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거시적인 균형발전 담론이 현장의 실질적인 지역 자립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지방이 직면한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우리가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으로의 유출,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내수 경제의 위축은 지방의 경제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단기적인 재정 투입,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인구 빼오기식 경쟁이나 일회성 사업 지원만으로는 이미 끊어져 버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복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비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재’입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한 문화적 욕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승부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줄어드니 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지방 투자를 기피하며, 결국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수동적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가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과 자본, 인재를 끌어당기는 ‘자립형·실천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핵심 무기가 바로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와 ‘파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오늘 모이신 지자체 정책 관계자, 학계 및 연구원, 그리고 현장의 기업인 여러분!
지방의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첫째,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둘째, 학계와 연구 기관은 지역의 특화산업이 지속 가능한 기술적·이론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산학연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셋째, 기업은 지방에서의 투자가 단순한 사회 공헌이나 지방 이전을 넘어, 기업 본연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앵커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정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거시적 균형발전론을 현장의 일자리 및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전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규제 완화 성공 사례부터 지역 앵커기업 육성, 지방투자펀드 연계, 그리고 청년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지·산·학 연계 모델까지 다각도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가 부산이라는 거점도시의 성공 모형을 넘어 전국 지자체와 상생·연계하는 대표적인 민간 정책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지방의 자립과 반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지자체·정책]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정책 활용 및 규제 혁파

1) 전국 지자체 지방소멸위험지수¹⁾ 현황

앞서 서론에서 강조했듯,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는 ‘좋은 일자리’이며,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출발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왜 지금 당장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지 전국 지자체의 객관적인 소멸 위험 통계를 통해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에서 전국 228개 시·구·군 중 소멸위험 지역(지수 0.5미만)에 진입한 곳은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 60%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 소멸위험지수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 미래 출생을 담당할 세대를 나타내는 가임기여성을 분자로, 분모를 고령인구로 두고 계산한 비율로써,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역의 인구재생산능력이 약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소멸위험지역의 수는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서 5년간 14개 증가(18.7%)에 그쳤지만, 2018년~2024년(118개) 사이에는 6년간 29개 증가(32.6%)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지난 10년간 57.3% 증가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본 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 주의단계에 8개 지역이며, 소멸위험단계에 8개 지역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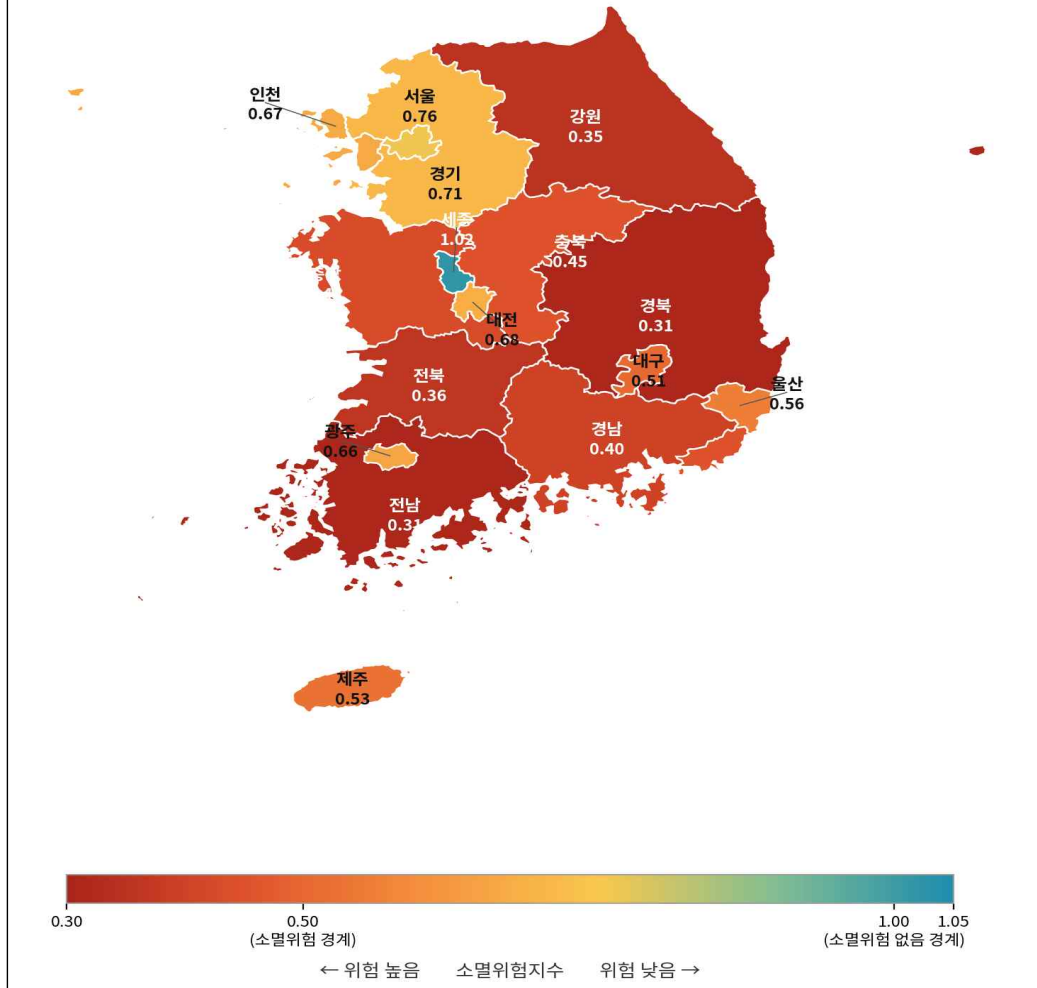
〈표 1〉 17개 시·도 평균 지방소멸위험지수(2025년)

시·도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비율	위험 단계
세종특별자치시	1.02	101.8	양호
서울특별시	0.76	75.8	주의 단계
경기도	0.71	71.1	주의 단계
인천광역시	0.67	66.9	주의 단계
부산광역시	0.45	44.8	소멸위험 진입
대구광역시	0.51	50.6	주의 단계
광주광역시	0.66	65.9	주의 단계
대전광역시	0.68	67.7	주의 단계
울산광역시	0.56	55.9	주의 단계
강원특별자치도	0.35	35.4	소멸위험진입
충청북도	0.45	45.1	소멸위험진입
충청남도	0.43	43.1	소멸위험진입
전라북도	0.36	36.2	소멸위험 진입
전라남도	0.31	30.6	소멸위험 (전국 최저)
경상북도	0.31	31.4	소멸위험
경상남도	0.40	39.9	소멸위험
제주특별자치도	0.53	53.4	주의 단계

주: ▲소멸위험없음 : 지수 1.00이상, ▲소멸위험 : 지수 0.5미만, ▲소멸고위험 : 지수 0.2미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5), “지방소멸 2025 :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관련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5년), 지역일자리팀.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수 (2025)



이중 부산시의 경우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멸위험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기업이 본격적으로 부산을 떠나는 시기 전후로 소멸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 0.48로 0.5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8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도 단위 농어촌에 한정되던 지방소멸위기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거점 대도시까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산의 소멸위험지수 하락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이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파격적 투자유치를 통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부산과 전국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표 2〉 부산광역시 연도별 소멸위험지수(2000~2025년)

연도	20~39세 여성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비율	분류 단계
2000	670,528	222,581	3.01	301.25	양호
2001	655,093	235,489	2.78	278.18	양호
2002	639,963	248,283	2.58	257.76	양호
2003	625,510	261,343	2.39	239.34	양호
2004	611,998	276,989	2.21	220.95	양호
2005	597,484	294,262	2.03	203.05	양호
2006	581,566	312,304	1.86	186.22	양호
2007	563,829	333,650	1.69	168.99	양호
2008	545,131	354,453	1.54	153.80	양호
2009	527,242	372,581	1.42	141.51	양호
2010	510,226	387,918	1.32	131.53	양호
2011	495,371	402,385	1.23	123.11	양호
2012	483,496	422,437	1.14	114.45	양호
2013	472,813	446,715	1.06	105.84	양호
2014	463,869	471,285	0.98	98.43	보통
2015	457,189	494,392	0.92	92.47	보통
2016	451,338	515,710	0.88	87.52	보통
2017	443,934	540,723	0.82	82.10	보통
2018	435,116	567,359	0.77	76.69	보통
2019	424,392	594,139	0.71	71.43	보통
2020	413,373	627,424	0.66	65.88	보통
2021	402,457	661,628	0.61	60.83	보통
2022	389,674	693,624	0.56	56.18	관리
2023	755,196	1,452,594	0.52	51.99	관리
2024	367,166	760,297	0.48	48.29	관리
2025	358,129	799,691	0.45	44.78	관리

주: ▲소멸위험없음 : 지수 1.0이상, ▲소멸위험 : 지수 0.5미만, ▲소멸고위험 : 지수 0.2미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5), “지방소멸 2025 :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관련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5년), 지역일자리팀.

다시 말해, 이러한 지수 악화의 본질은 결국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낼 지역 경제 생태계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통계 수치는 우리 지자체 행정이 과거 방식의 일회성 사업 지원이나 단순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를 통한 근본적 산업 체질 개선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기회발전특구·투자진흥지구 등 정부 정책의 전략적 연계 및 활용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활용해야 할 핵심 국정 과제가 바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과거의 지방 지원책이 전국에 예산을 평등하게 나눴던 방식이라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기획하고 기업투자안을 가져오면, 정부가 파격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입니다.

지자체 정책 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히 특구 지정 신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멸 위험을 반전시킬 특화산업 및 앵커기업이 정말로 요구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를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세제 및 금융 혜택의 입체적 설계입니다. 상속세 연오납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 국세·지방세 세제 혜택을 지자체 자체 조례와 연계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 규제 특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장애물인 규제와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구 신청시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새로운 산업이 즉시 적용되는 규제 프리존을 조성해야 합니다.

3)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프리를 통한 성공 사례 구축

투자 유치 성공 사례의 핵심 공통점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부지선정부터 법적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용수·전력 구축까지 수년이 걸리던 절차를 지자체가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단축해 줄 때 기업은 지방 투자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지자체 유희 부지의 장기 임대 제공, 고용·교육훈련보조금 확대 등 파격적 지원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소멸위험지수를 반전시키고 지역내총생산(GRDP)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에 처한 지금, 행정의 핵심 과제는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자산을 활용하면서 지자체만의 규제 완화 패키지와 행정 패스트트랙을 결합할 때, 지방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산업] 앵커기업 유치 및 지방 투자 펀드 생태계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혁파라는 제도적 인센티브는 지방 자립을 위한 아주 훌륭한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인 초광역 메가리전(Mega-Region)의 틀을 짜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프리존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 위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주인공인 기업이 없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경제의 혈류를 힘차게 돌게 할 그 핵심 주인공은 ①바로 지역 생태계를 건

인할 핵심 앵커기업(Anchor)기업이며, ②그 기업들이 지속해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투자펀드 및 금융 생태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축인 기업과 자본이라는 시장의 동력을 어떻게 지방으로 흘러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 실행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역 생태계를 이끌 핵심 앵커기업 유치 및 지방투자펀드 생태계 구축 전략

(1) 지역 생태계를 이끌 핵심 앵커기업 유치

① 17개 시도별 핵심 특화산업 및 앵커기업 현황

5극3특(초광역 메가리전) 권역 체계에 맞추어 각 지자체별 주력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핵심 앵커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연계 투자기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대기업을 ‘단순 조립·생산공장’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면, 최근 지자체들은 R&D 연구센터, 시험평가 거점, 핵심 밸류체인 소재 기업 중심의 기술 주도형 앵커기업 유치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항의 포스커·에코프로, 오창의 LG엔솔, 새만금의 LS·성일하이텍 등은 기회발전특구의 세제·규제 인센티브와 맞물려 대규모 민간 투자가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표 3〉 동남권(부·울·경 메가리전)

시·도	핵심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부산광역시	친환경스마트해양, 금융·핀테크, 양자·디지털, 르노미래차클러스터	르노코리아, BNK금융그룹, 파나시아, 파크시스템스	미래차 전환 및 이차전지 신소재 투자, 해양 IT 벤처 육성
울산광역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석유화학 고동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수소밸류체인 및 비철금속 신성장 동력 구축
경상남도	우주항공(K-우주센터)방위산업, 원전·스마트 해양플랜트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지, 현대로템	우주항공청 개청 연계클러스터 조성, K-방산·원전 수출전진기지

〈표 4〉 대경권(대구·경북 메가리전)

시·도	핵심 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대구광역시	미래 모빌리티, ABB (AI·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엘앤에프, HD현대로보틱스, 삼보모터스, 대동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용 서비스 로봇 생태계 주도
경상북도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백신, 차세대 반도체 부품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바이오사이언스, SK실트론	포항(이차전지)·안동(바이오)·구미(반도체 부품) 삼각 혁신축 형성

〈표 5〉 중부·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메가리전)

시·도	핵심 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대전광역시	첨단 국방 ICT,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양자 R&D	한화시스템,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패밀리 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반 딥테크 유니콘 및 R&D 스피노프 육성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스마트시티 IT, 스마트 엔지니어링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 남양유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가 첨단 데이터 인프라 거점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석유화학 전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현대위아, SK온	아산-천안 중심 차세대 OLED 특화단지 및 서해안 탄소중립 클러스터
충청북도	첨단 반도체 패키징, 이차전지 완제품/셀, 바이오의약	SK하이닉스(청주), LG에너지솔루션(오창), 에코프로, 셀트리온제약(오송)	오창(배터리 R&D 거점) 및 오송(K-바이오 스퀘어) 중심 글로벌 생산 허브

〈표 6〉 호남권(광주·전남 메가리전)

시·도	핵심 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광주형 일자리)	기아(광주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 NHN(국가AI 데이터센터)	국가 첨단 AI 융복합단지 및 완성차 제조 클러스터
전라남도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 우주발사체, 친환경 철강·석유화학	한국전력공사, 포스코(광양제철소), GS칼텍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흥)	에너지 신산업 벨트, 광양수소환원제철, 고흥우주발사체 특구

〈표 7〉 수도권

시·도	핵심 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서울특별시	금융·핀테크, AI 딥테크, 바이오 R&D 허브	주요 금융지주 본사, 네이버·카카오(AI/R&D 거점), 대웅제약(마곡)	국가 경제 컨트롤 타워 및 글로벌 본사·금융 클러스터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첨단 IT·자율주행	삼성전자(기흥·평택·화성), SK하이닉스(이천·용인), 현대차 남양연구소	세계 최대 반도체 밸류체인 및 R&D 중심지
인천광역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CDMO), 항공·MRO 물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송도), 대한항공(MRO)	송도 바이오 메가 플랜트 및 영종 항공물류 혁신기지

〈표 8〉 3대 특별자치도

시·도	핵심 특화산업	대표 앵커(Anchor) 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특징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핵심소재, 첨단 방위산업, 탄소 신소재	효성첨단소재, LS MnM, 성일하이텍, 하림그룹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밸류체인 및 탄소 복합재 특화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정밀의료, 반도체 테스트베드, 미래 수소 모빌리티	바디텍메드, 메디톡스, 한국콜마(강릉), 삼척 E1(수소 인프라)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벤처 및 동해안 수소 에너지 벨트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민간위성), 그린수소 에너지, UAM(도심항공교통)	한화시스템(우주센터), 페리저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민간 위성 발사 및 청정 그린수소 실증, 미래형 항공교통 선도

이렇게 각 지자체별 핵심 특화산업과 앵커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제 외한 비수도권, 특히 부산은 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연구자는 부산의 앵커기업들은 과거 전통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으나, 본 발표에서 제시한 ‘청년 유출 방지 및 신산업 생태계 견인’이라는 차세대 앵커기업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앵커기업의 현주소와 이상적 모델 간의 괴리입니다. 먼저, ‘전통 제조와 단순 생산’ 중심 구조로 인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르노코리아 등 부산의 대표 제조업 앵커기업은 강서산단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 및 협력 업체 고용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SW), 기획, 마케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본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공장은 ‘단순 조립과 생산기지’로써의 성격이 강해, 지역 대학이 배출하는 우수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청년 인재를 흡수하지 못하고 수도권 유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가 금융 거점으로서 파급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BNK금융그룹과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한 공공 금융기관(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금융 앵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 자본이 지역의 딥테크(Deep-tech) 스타트업, 미래 모빌리티 벤처 등 실물 신산업으로 흘러가는 ‘지방투자펀드 생태계’의 연계 고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자금은 공공과 전통 금융 테두리에 머물고, 지역 유망 기술 기업들은 시리즈 B이상의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서울(강남·판교)로 본사를 이전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앵커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그에 따른 안착하는데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차전지·첨단소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던 향토 기업(예: 금양 등)들이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차세대 앵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고용 창출과 전후방 협력사 동반 집적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디고,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 지역 경제 전환을 견인하는 안정적인 클러스터 앵커로 안착하기까지는 여전히 검증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지표가 증명하는 앵커기업 역할의 한계입니다. 부산의 앵커기업의 한계는 앞서 확인한 부산의 인구 및 소멸위험지수 통계에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먼저, 인구 데이터에서 경고하듯이 부산은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수 0.48을 기록하며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유출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20~39세 청년 여성 인구는 2000년 약 67만명에서 2025년 약 35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앵커기업이 작동했다면, 청년 일자리가 유지되고 인구 유출이 완화되어야 하지만, 기존 앵커기업들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와 미래 비전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에 앵커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 연고에서 지향하는 ‘전후방 밸류체인 견인, 양질의 R&D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모험자본 연계’라는 생태계형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은 50%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과거의 단순 기업 유치를 반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과 지·산·학 연계를 결합해 부산 앵커기업의 체질을 R&D·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② 17개 시도 중 앵커기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대표 지역

○ 충청북도 청주·오창 : 완제품-소재-R&D의 완성형 배터리 클러스터

충청북도 청주와 오창의 대표 앵커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에코프로로써 이들 기업들이 앵커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핵심 R&D 및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로 안착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에 차세대 원통형 4680배터리 등을 시험 생산하고 공정을 검증하는 연구개발 거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는 고학력 엔지니어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지방 상주를 이끌어내며 청년 연구직 일자리를 대거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입니다.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양극재 전문기업인 에코프로가 인근에 집적되면서, 수많은 소부장 협력사가 연쇄적으로 충북권에 자리를 잡는 전후방 생태계 폭발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청주와 오창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2030 청년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순유입되므로써 비수도권 중 가장 탄탄한 고용률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 : 전통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바이오 첨단 밸류체인’으로 대전환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표 앵커기업은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미티리얼즈, 포스텍(POSTECH)으로써 이들 기업들이 앵커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향토 대기업의 과감한 신산업 앵커로의 체질 전환때문이었습니다. 기존 포스코는 제철이라는 단일 구조에 머물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포스코퓨처엠(양극재/음극재) 및 친환경 소재 투자를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집중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앵커기업 간 경쟁과 동반 투자를 집적시켰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에 이어 에코프로그룹이 영일만 산단에 수조 원대 배터리 캠퍼스를 신설하면서, 두 대형 앵커기업이 수십 개 중소 협력사를 포항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포스텍(학계·연구)과의 완벽한 지·산·학 연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방사광 가속기 등 최고급 연구 인프라가 앵커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졸업생이 창업하거나 앵커기업의 연구원으로 직행하는 산학 R&D 선순환이 구현되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 : R&D 기반 딥테크 유니콘 및 자생적 벤처 생태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대표 앵커기업은 한화시스템, 알테오젠, 레고켄바이오(리가켄바이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패밀리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반 기술 스핀오프(R&D 중심) 때문입니다. 바이오 및 딥테크 벤처들이 코스닥 상장과 기술 수출(L/O)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지역으로 다시 회수되고, 이것이 후배 스타트업에 재투자되는 자생형 지방투자펀드 생태계를 비수도권에 유일하게 완성했습니다.

〈표 9〉 앵커기업 모범 지역 vs 한계 지역 비교

구분	모범 지역 (충북 오창, 경북 포항, 대전)	한계 지역 (부산 등 기존 전통 대도시)
기능적 성격	R&D 연구센터 + 핵심 신소재·신산업 본사 기능	단순 제조·조립 공장 위주, 본사/R&D는 수도권 잔류
일자리 성격	석·박사급 연구직, 첨단 엔지니어 (청년 선호)	생산직 위주로 청년 대졸자 눈높이 미스매치
밸류체인	핵심 앵커를 중심으로 전후방 협력사 수십 개 집적	단순 1~2차 벤더에 머물러 신산업 확장성 부족
금융/자본	펀드 투자 회수 및 지역 내 재투자자의 순순환 구조	전통 공공금융 중심, 딥테크 모험자본 연계 미흡

③ 지산학 협력 지역 특화산업 육성 성공 사례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거점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Triple Helix)를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주 의료기기 산업: 자생적 태동과 클러스터의 고도화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특화산업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전무하던 1998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부와 원주시가 자생적으로 시작한 창업보육센터가 그 모태가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원주 의료기기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8,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업체 수도 2002년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의료기기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보인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학 주도의 기술 공급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의공학부를 보유한 연세대학교의 연구 인력과 기술력이 초기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전담 지원기관의 역할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R&D, 인허가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 기업 밀착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정부·지자체의 집중 투자입니다. 2005년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자금 지원이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앵커 공공기관 기반의 생태계 조성

전남 나주의 에너지밸리는 한국전력공사(KEPCO)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추진된 '공공기관 주도형' 클러스터 모델의 대표 사례입니다.

2015년 조성을 시작한 이후, 2019년까지 36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투자유치 규모는 약 1조 5,026억 원에 달하며, 약 9,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인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앵커기업(KEPCO)의 유인 효과입니다.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공기업들이 동반 이전하며 관련 기술 협업을 원하는 민간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했습니다.

둘째, 기술 사업화 인프라입니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및 창업 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입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특구 연계 정책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R&D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했습니다.

○ 김해 의생명 산업: 기존 제조 기반의 산업 전환(Pivot)

김해 의생명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기계·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의생명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기존 산업 혁신형' 사례로 분류됩니다.

김해의생명센터를 중심으로 동남권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보인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자체 산하 진흥원의 전문성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충부터 창업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둘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협업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의료기기 등의 신산업 분야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④ 지역 생태계를 이끌 핵심 앵커기업 육성 전략

이상과 같이 지역 특화산업 성공의 보편적 결정 요인에 대해 김홍삼 (2024)에 따르면, 원주 의료기기 사례 등을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 산업 발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압축됩니다. 첫째, 지자체의 정책 육성 의지와 예산 및 자금 지원, 그리고 법률·행정적 배려와 같은 적극적 지원이었습니다. 둘째, R&D 및 기술 사업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전문 기관인 지역특화센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지리적 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 산업단지 와 공동 장비 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특화산업 전후방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역 인력 고용 연계를 통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구성원들의 지지와 관련 학과의 인재 양성 노력과 같은 지역 사회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단순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단순 조립 공장 수십 개를 유치하는 데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협력사와 연구 인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단 하나의 강력한 앵커기업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앵커기업은 단순한 고용 창출 주체를 넘어 지역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생태계 구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앵커기업이 지방 거점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 부품·소재 공급업체부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물류, 연구개발(R&D)에 이르는 전후방 연관 협력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동반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기술직·전문직 일자리가 대거 창출됨으로써 수도권으로 떠나려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역유입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대기업의 단순 제조 공장만 지방으로 유치하던 수동적 접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부산과 동남권의 친환경 해양모빌리티와 AI기반 첨단 제조 등 각 권역별 특화산업과 긴밀하게 맞물린 기술 주도형 앵커기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R&D 연구센터와 핵심 본사 기능이 통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 장기임대, 세제감면, 인허가패스트트랙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펀드 및 자생적 금융 생태계 구축 전략

앞서 우리는 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핵심 앵커기업의 유치 및 육성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망한 앵커기업을 타깃팅하고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지역에서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의 혈류가 돌지 않는다면 지방 이전과 창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벤처·성장 금융의 가장 심각하고 아픈 현실은 바로 모험자본의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입니다. 국내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 액셀러레이터(AC)의 80~90% 이상의 서울 강남과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 자리잡은 유망 기술 기업들은 초기 시드투자를 가까스로 유치하더라도,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시리즈B, 시리즈C 단계의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을 확보하기 못해 결국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만성적인 자금난에 빠져 고사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이 스스로 먹고 사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자본이 지방 내부에서 형성되고 순환하는 금융 인프라의 지방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금융 실행 전략을 제안합니다.

① 지자체·정부·금융기관이 결합한 대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모펀드 조성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한 규모 있는 메가펀드 조성입니다. 중앙정부의 모태펀드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지역에 뿌리를 둔 지방은행(BNK, DGB 등)과 이전 앵커기업의 상생 출자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특화혁신모펀드(Fund of Funds)를 대폭 확대 조성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소규모 펀드를 쪼개어 단순 생계형 지원금처럼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고부가가치 딥테크 기업을 기워낼 수 없습니다. 최소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소재, 우주항공, 인공지능 제조 등 권역별 주력 특화산업 기업에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든든한 실탄을 공급해야 합니다.

② 지역투자자의무비율의 엄격한 제도화와 역내 자본 선순환

두 번째 펀드의 자금이 온전히 지방 생태계로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운용원칙의 확립입니다. 펀드를 결성할 때 협약 조건에 결성 총액의 최소 60%이상을 반드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관내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된 펀드 자금이 수도권 유망 기업으로 역유출되는 구

조적 허점을 차단하고, 지역의 소부장 강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끊임없이 자금을 조달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는 자생적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③ 민간 모험자본 유인을 위한 공공 안전장치(우선손실충당) 및 보증 연계혁신

세 번째는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의 설계입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VC들이 비수도권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회수(Exit)의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 출자자가 펀드 손실 발생 시 일정 비율(예: 10~20%)을 먼저 떠안아 주는 공공 우선손실충당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민간 출자자의 원금 리스크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지방 투자 펀드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 보증과 저리 용자를 원스톱으로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지방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④ 실물산업과 금융이 결합하는 지방 자립의 완성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공공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탱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적 마당 위에 앵커기업들이 들어서고, 그 기업과 협력사들의 맥박을 뛰게 하는 지방투자펀드의 자금줄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제의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지방으로의 투자가 곧 가장 매력적이고 안전한 고수익 비즈니스가 된다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우리 지자체와 금융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증명해 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산업과 자본 생태계 위해서, 현장을 누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산·학 협력 및 정주 인프라 대전환 전략에 대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4. [학계·연구] 지·산·학 연계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앞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앵커기업 유치, 그리고 자생적 투자펀드 생태계라는 하드웨어적·금융적 토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매력적인 세제혜택과 훌륭한 일자리가 마련된다 한들, 그 현장을 채울 숙련된 인재가 없고, 그들이 안심하고 뿌리내릴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 없다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이 직면한 가장 아픈 현실은 청년 인구의 유출과 지역대학의 소멸위기가 맞물린 인재 공동화입니다. 기업은 지방에 오고 싶어도 채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다닐만한 매력적인 일자리와 문화가 없다며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앵커기업이 하나로 묶이는 지·산·학 일체형 인재 육성과 더불어 일·주거·문화가 융합된 정주여건의 대전환이 동시에 단행되어야 합니다.

1) [지·산·학 혁신] 공급자 중심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 전초기지로의 대전환

첫째, 지역대학을 앵커산업과 직결된 ‘주문형 인재양성소’이자 ‘공동 R&D 허브’로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먼저 100% 채용 연계형 앵커 계약학과 및 융합 캠퍼스(Campus Lab)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백화점식 교육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유치된 앵커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수요를 100% 반영한 ‘채용보장형 계약학과’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3자 완결형 모델입니다. 나아가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앵커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산학융합형 ‘캠퍼스팍’을 통해 학위 취득과 실무 프로젝트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인력 정착을 위한 파격적 R&D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석·박사 고급 연구인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방 근무 연구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과학기술인 지역 정착 특별수당 지급, 지자체 주도 공동 기술개발 지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두뇌 유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정주여건혁신] 일자리를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사다리

둘째, 청년과 전문인력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직·주·락(職·住·樂)’이 완결되는 정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단순한 임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주거비용, 의료안전망, 자녀교육, 문화적 향유 기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제로(Zero)화 및 첫 집 마련 사다리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및 도심 융합특구 인근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분양 연계형 ‘지방 정착 안심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취업 초기 3~5년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장기 근속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택 청약 특별공급 혜택을 전면 강화합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및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입니다. 우수 인력의 가족 동반이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지역거점 병원 내 소아·야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확충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전하는 필수 의료 안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특성화고 등 수도권 못지 않은 공교육 혁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때문에 역외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삶이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레저 벨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회색빛 공장지대 중심의 산업단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청년 복합문화센터,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거리, 야간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어메니티를 확충해야 합니다.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삶은 서울에 있다”는 인식을 깨고, 지역 내에서 여가와 소비, 자기계발이 완결되는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3) 사람-기업-공간이 순환하는 자생적 균형발전 모델

결론적으로, 정책 인센티브가 기업의 투자 문턱을 낮추고, 앵커기업과 자본이 경제적 동력을 점화한다면, 그 불꽃을 지속 가능하게 태우는 산소는 바로 인재와 정부 여건입니다.

대학이 길러낸 앵커기업에 취업하고, 매력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가정을 꾸리며, 그들의 소비와 역량이 다시 지역 사회를 살찌우는 ‘인재양성-취업-정주-지역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오늘 우리는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창립 세미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담론에 머물던 균형발전을 현장의 일 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한 주제발표의 핵심 줄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5극3특 초광역 메가리전’ 구상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공간의 ‘새로운 판’이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 드린 앵커기업 및 특화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전략은 그 판을 살아 움직이게 할 ‘실질적인 혈류이자 알맹이’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정책·행정측면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지자체 행정이 규제 완화와 기회발전특구를 선제적으로 융합하여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파격적인 제도적 마당’을 깔아주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에 처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 보조금 지원이나 소모적 인구 빼오기 경쟁으로는 더 이상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원스톱 패스트트랙과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장벽을 허무는 혁신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금융측면에서 제시했던 내용에서는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R&D와 본사 기능이 결합된 ‘기술 주도형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맥박을 뛰게 할 ‘지방 활성화 투자 모펀드’라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모험 자본의 80~90%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실을 깨지 않고서는 우수한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소 60% 이상의 지역 의무 투자 비율과 공공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해, 자본이 지방 내부에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인재·정주측면에서 제시했던 내용에서는 대학을 앵커산업 맞춤형 인재 공급 전초기지로 바꾸는 ‘지·산·학 일체화’와, 청년들이 일터와 삶터, 놀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정주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이 들어선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고 삶의 터전이 열악하다면 그 불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와 청년 주거 안심 지원, 필수 의료와 교육 혁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인재의 정착 사다리가 완성됩니다.

결국 지방소멸 극복과 자립경제의 완성은 제도, 기업과 자본, 사람과 공간이라는 3대 축이 유기적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실현됩니다. 정부의 시혜성 예산 지원에 의존하던 수동적 균형발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곧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정주로 연결되는 시장 친화적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첫 닳을 올린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는 바로 이 대전환의 길에서 명확한 시대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첫째, 거시적 담론에 머물던 국가균형발전론을 지방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Action Plan)’으로 전환하는 민간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둘째, 부산이라는 해양 거점의 성공 모델을 발판 삼아,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를 하나로 잇는 ‘전국 단위의 강력한 상생 거점 허브’로 기능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5극3특이라는 국가 대전환의 판 위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특화산업의 꽃을 피우고 청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치는 활기찬 지방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 벅찬 여정의 맨 앞자리에서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가 언제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뛰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좌장 |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론 | 김종한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강승주 (부산시의원)

백충기 (BNK경영연구원 부울경경제연구팀장)

[토론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립형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

1. 총평

상기 발표문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자원 배분과 단순 인프라 공급에 머물렀던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파산을 명확히 짚어내고, 지방 스스로 기업과 자본, 인재를 끌어당기는 ‘자립형·실천형 경제 생태계’의 대안을 제도·행정, 기업·자본, 사람·정주의 세 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탁월한 정책적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시·구·군의 60%에 육박하는 소멸위험 현실과 더불어, 대도시이자 제2도시인 부산마저 소멸위험지수 0.45(2025년 기준)로 광역시 최초의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실증 진단은 현장 중심 산업 전략의 시급성을 강력히 환기한다. 본 발표는 필자가 지난해 공저로 출간한 《지역인재정책》에서 일관되게 주창했던 지·산·학 협력과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론을 한층 현실적이고 정교한 실행 체계로 업그레이드한 모범적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본 발표문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물리적 자본·인구 유치’ 문법에 상당 부분 기대어 있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지방은 수도권에 투자를 흡수하거나 단순 방어전에 머무는 수세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발표문이 제시한 자립형 생태계 모델이 실질적인 지역 혁신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AGI 시대 지역의 독점적 자산을 지렛대 삼아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로컬의 반격’ 관점에서의 전면적인 정책 고도화와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 《지역인재정책》 관점에서 본 발표문의 특징점

발표문은 지역이 직면한 일자리 부재와 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론을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매우 정밀하게 구조화했다. 이는 《지역인재정책》에서 강조한 자생적 인재 생태계의 구성 요건과 긴밀히 맞닿아 있으며, 다음과 같은 뚜렷한 강점을 지닌다.

1) 기회발전특구와 규제 혁파의 상향식(Bottom-Up) 연계

정부가 획일적으로 배분하던 하향식 특구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앵커기업의 실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세제·규제 특례(상속세 연부연납, 지방세 조례 연계, 규제샌드박스 등)를 패키지로 설계하는 상향식 모델을 정교하게 제안했다.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인프라 구축까지 행정 절차를 압축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의 강조는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의지가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자원임을 입증하고 있다.

2) 기술 주도형 앵커기업 유치와 지방투자펀드 생태계의 결합

부산 등 전통 대도시의 앵커기업들이 R&D와 본사 기능을 수도권에 둔 채 단순 조립·생산기지 역할에 그쳤던 본질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다. 충북 오창(배터리 클러스터), 경북 포항(이차전자·바이오), 대전 대덕(딥테크 벤처)의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사를 견인하고 석·박사급 고급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R&D 중심 앵커기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벤처캐피털(VC) 풀림을 깨기 위해 대규모 지역 활성화 모펀드 조성, 60% 이상의 지역의무투자 비율 설정, 10~20% 공공 우선손실충당 등 모험자본의 지방 순환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안한 점은 실물과 금융의 융합 측면에서 매우 돋보인다.

3) 지·산·학 일체형 인재양성과 ‘직·주·락(職·住·樂)’ 정주 사다리 완성

대학을 공급자 중심에서 앵커산업과 직결된 ‘주문형 인재양성소’로 전환하기 위해 채용보장형 앵커 계약학과와 캠퍼스 유희부지를 활용한 ‘캠퍼스팸(Campus-Fab)’을 제안한 점은 지역 청년의 탈지방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교육 모델이다. 나아가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 주거비 제로화, 필수의료 및 공교육 혁신, 문화·여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엮은 ‘직·주·락 정주 사다리’를 체계화한 것은 인재 정착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훌륭히 구현한 대목이다.

3. 《로컬의 반격》 관점에서 본 발표문의 보완점

본 발표문이 자립형 지역경제의 토대를 탄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GI라는 비가역적 파도 앞에서 지역이 독자적 생존을 넘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쟁점이 보완되길 바란다.

1) 인구밀도 경쟁을 넘어 ‘지능밀도(Intelligence Density)’로의 대전환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청년 인구의 물리적 거주와 정착을 정책의 최종 종착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분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절벽의 국면에서 머릿수를 채우는 ‘인구밀도’ 경쟁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한다. AGI 시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척도는 지역 내 인재와 연산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폭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밀도’다. 앞으로 지방은 물리적 인구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와 스타트업에 초고성능 GPU·NPU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AI 연산 바우처’와 ‘컴퓨팅 쿼터제’를 구축해 인구당 두뇌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2) 앵커기업 중심의 ‘AI 버티컬 데이터셋’ 및 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발표문에서 다룬 앵커기업 유치론은 전통적인 R&D와 제조 벨류체인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도권 빅테크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로컬의 독점적 무기는 수십 년간 축적된 조선, 해양, 미래 모빌리티, 정밀제조 현장의 폐쇄적 실물 데이터다. 앵커기업 유치는 단순한 연구소 유치에 머물러선 안 되며, 지역 전략산업의 현장 센서·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제·공유하는 ‘AI 버티컬 데이터 관제센터’와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지역의 지능 흐름 실태 파악을 위한 ‘AI 데이터 관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피땀 어린 현장 데이터를 독자적 데이터셋으로 가공해 버티컬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능의 흐름이 적재적소 흐를 수 있도록 관제가 되어야만 기술 주권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다.

3) 단순 IT 인력 양성을 넘어선 ‘지역 지능 혁신가’ 육성과 ‘디지털 이식’

채용계약학과 중심의 인재 양성은 자칫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수도권 플랫폼 기업의 하청 인력 양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AGI 시대 지역이 길러내야 할 핵심 인재는 지역의 현장 데이

터를 꿰뚫어 보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솔루션으로 치환해 내는 ‘지역 지능 혁신가’다. 또한 모든 인재를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 원격 협업 인프라와 디지털 트윈을 통해 외부 고급 두뇌의 역량만을 지역 R&D에 착근시키는 ‘디지털 이식(Digital Transplantation)’, 그리고 해외 인재에게 디지털 지분을 부여하는 ‘테크 주권 비자’와 같은 유연한 지능 유입 거버넌스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

4) 시·군·구 각자도생을 깨는 ‘부울경통합특별시’의 시급성과 ‘재정주권’ 확립

발표문이 권역별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 방안은 개별 지자체의 인센티브와 특구 유치 단위로 쪼개져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행정 구역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부울경을 단일 경제권이자 일체화된 메가리전으로 재편하는 ‘부울경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절대적 전제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꼬리표 붙은 국고보조금 방식을 혁파하고,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부분(약 30%)을 지자체에 자주재원으로 직접 배분하는 ‘재정주권’의 확립이 담보되어야만, 발표자가 강조한 지방투자 모펀드와 파격적 인센티브가 흔들림 없이 가동될 수 있다.

상기 발표문은 침체된 지역 산업 생태계에 자립과 실천의 구체적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

이 우수한 정책 청사진 위에 AGI 문명사적 격변을 돌파할 ‘지능밀도’, 지방자치단체장 직할 ‘AI 데이터 관제센터’의 운영, ‘부울경통합특별시’, 그리고 ‘재정주권’이라는 공격적 무기가 더해진다면, 단순한 지방소멸 방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뒤흔드는 진정한 의미의 ‘로컬의 반격’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이 지역 자립을 향한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소의 담대한 여정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강 승 주

[토론문]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자립형 지역경제 생태계를 기대하며

1. 자립형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강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을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청년 유출, 기업의 인재난,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가 서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제도와 행정, 기업과 자본, 인재와 정주라는 세 축을 제시한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접근을 넘어, 지방이 고유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자본·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부산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산은 금융과 해양·물류, 모빌리티, 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와 지역 주도 벤처펀드, 부산형 RISE 등 이를 연결할 정책수단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정책을 하나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결합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 기회발전특구,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주제발표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규제 개선, 신속한 행정지원을 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세제혜택뿐 아니라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 부지와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제안입니다.

부산은 금융 분야와 첨단산업 분야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앞으로는 특구를 개별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연구개발과 핵심 기능이 부산에 자리 잡고, 지역기업이 공동 연구와 납품·실증에 참여하며,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때 특구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협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뿐 아니라 지역기업 협력, 공동 연구개발, 지역인재 양성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기업의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역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 앵커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성장 동시 추진

주제발표에서 강조한 앵커기업은 협력기업과 연구인력, 자본을 끌어들이는 산업생태계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부산의 산업정책은 외부로부터의 앵커기업 유치와 기존 지역기업 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추진할 때 더욱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랜 기간 기술과 거래관계를 축적한 제조·해양·물류 분야 기업들이 있고, 금융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기업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 기업의 본사·연구소·실증 기능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차세대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연구개발, 사업화, 수출, 인재 확보를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확대하고, 둘째, 공공 실증시설과 대학의 장비를 기업이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셋째, 투자유치 협약에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기업과 지역기업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과 시장을 함께 만드는 관계가 될 때 부산만의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 지역펀드는 기업의‘성장사다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주제발표는 지역기업이 초기투자 이후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투자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도 미래성장 벤처펀드 등 지역 주도 모펀드를 조성하면서 지역의 모험자본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펀드의 조성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초기투자에서 후속투자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 초기기업뿐 아니라 시장 진입과 생산 확대를 준비하는 기업,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과 보증·정책 금융·판로 지원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이 출자하는 펀드는 정책성과와 투자 전문성을 조화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후속투자 유치, 고용과 매출의 성장, 지역 내 사업기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되, 민간 운용사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투자 성과와 지역경제 효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면 시민의 신뢰와 민간자본의 참여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산업과 대학, 청년의 미래를 하나의 경로로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채용연계형 교육과 산학융합 공간은 부산형 RISE와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대학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이 교육과 연구에 직접 참여한다면, 청년에게는 부산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가 생기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가 됩니다.

다만, 인재양성은 특정 기업의 단기 수요에만 맞추기보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방식, 기업의 채용계획이 변하더라도 학생이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재교육까지 포함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성과평가도 교육과정 수나 참여인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졸업생의 부산 취업과 고용유지, 전공과 직무의 연계, 기업의 교육과정 참여, 공동 연구개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대학과 기업에 다시 제공되어 다음 교육과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마련한다면 부산형 RISE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 정주정책은 산업정책의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점

청년의 지역정착은 일자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경력 전망과 적절한 보상,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편리한 교통, 의료·교육·돌봄, 문화와 여가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발표에서 제시한 직·주·락의 관점은 산업정책과 생활정책을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지역, 교통망을 따로 계획하기보다 청년이 실제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권역을 기준으로 정책을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구와 산업거점 주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취업 초기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며, 생활SOC와 문화공간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유치 협의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주거·교통·교육 수요를 함께 파악한다면 기업의 정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시의회의 역할

지방의회는 산업정책의 직접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째,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지역펀드, RISE, 청년정책이 공통의 목표 아래 연계되도록 예산과 정책을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상 비밀은 보호하면서도 실제 투자와 고용, 지역기업 협력, 인재양성 등 시민이 확인해야 할 성과가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대학, 청년, 노동자,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공론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행정이 정해 주는 이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과 인재를 공급하며, 시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때 비로소 지역에 뿌리내립니다. 따라서 부산의 산업정책도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기업·자본·인재·생활환경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3. 맺음말

오늘 발표가 제시한 제도와 행정, 기업과 자본, 인재와 정주는 어느 하나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특구와 투자유치가 기업의 성장으로,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가 청년의 정착과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도 정책을 지적하는데 머무르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보완하며, 좋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경희 부소장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가 지역의 담론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는 든든한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BNK경영연구원 부울경경제연구팀

팀장 백 총 기

지방의 인적, 물적 자본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의 1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에 인구, GRDP, 유권자, 기업본사, R&D연구비, 금융기관 여수신 등이 50~80% 가량 쏠려있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제 사회전반의 지역소멸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러워졌다. 주제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전국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만큼 제대로 된 성장전략 마련과 정책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경로 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도 지역성장에 역할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그래서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앵커기업 유치와 지방투자펀드 생태계 마련은 매우 핵심적인 지적으로 생각된다.

실물경로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부활’이 핵심이다.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 등 동남권의 일부 주력 산업이 반등하고 방산, 우주항공 등의 성장기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도권의 첨단산업 성장수준과는 온도차가 있다.

금융경로는 더욱 문제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가속화는 지역의 자금부족 및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지역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지역자금 유출 수준은 2000년대 연평균 13조원이었으나 최근 연간 30조원을 넘어섰다.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면서 소비, 투자 등 경제순환 고리는 약화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연간 130조원이 넘는 소득이 유입되면서 경제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동남권과 전국평균 성장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전국과 성장격차 확대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가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19년중 동남권은 연평균 1.9% 성장하며 전국(3.4%) 대비 절반 수준의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 이후(2021~25년)에도 전국(2.4%)과 비슷한 2.6% 성장에 그치면서 오랜기간 낮아진 경제활력을 만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전반의 운영원칙이 최소투입으로 최대산출을 얻는 효율성(Efficiency)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인 회복력(Resilience)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강조한 자립형 경제 생태계 3대 축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미래기술력 확보, 글로벌 디지털 표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함께 기업과 인재 유치 그리고 자금환류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졌다. 지역은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로 탈바꿈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대외충격에 강하고 빠른 회복력을 가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스스로 혁신적인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전략 실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앵커기업 유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함께 지원 전담기관 설립하고 R&D, 인력양성, 금융지원, 행정 원스톱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도 지역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이 빠르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 동시에 지역이 자금 선순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특화 금융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자 동시에 ‘변화의 압력’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지역전반이 지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NAUGURAL SEMINAR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국가 대전환의 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혁신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사)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는 산업통상부 허가 비영리 학술법인으로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 공동체로서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을 비롯하여 행정·법률·경제정책 및 제도 개선,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포용적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경제와 산업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지정기부신청

